



## **BRIC Technical Report**

### **제25차 BRIC Poll**

### **국가 R&D 희생자에 대한 보상체계**

공지) 본 보고서는 BRIC에서 기획하고, 조사 및 분석한 자료로써, 부분 혹은 전체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자료 출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를 명기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관련 문의처: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전화: 054-279-8198, 팩스: 054-279-5540, E-mail: member@bric.postech.ac.kr

**@Copyright 2004. Made in BRIC**

BRIC Technical Report



Biologic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문서 제목 : 제25차 국가 R&D 희생자에 대한 보상체계

문서 편집일 : 2004년 10월 11일

문서 작성자 : 생물학연구정보센터 (BRIC)

보고서 책임자: 정동수 연구개발실장

자료통계분석: 박지민

분석 및 편집: 박지민, 장영옥, 이강수

총분량 : 10 페이지

- 목 차 -

1. 설문목적 .....3

2. 설문환경 .....3

3. 결과요약 .....3

4. 세부내용 분석 .....4

    1) 설문참여자의 성향.....4

    2) 대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도.....5

    3) 국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 .....6

    4)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상제도들 중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6

    5) 보상기구 설립의 운영형태 .....8

<< 설문 문항>> ..... 10

## 1. 설문목적

지난 8월 말 항공대 은희봉 교수, 황명신 교수가 소형비행기 ‘보라호’의 시험비행 도중 추락사고로 희생되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을 위해 희생된 2분 교수에게는 과학기술훈장 혁신장이 추서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로 과학기술인들 중심으로 국가 R&D 수행과정에서 희생된 과학기술인에 대한 보상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오 연구자들 역시 밤낮으로 연구하면서 여러종류의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항공대 교수와 같은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본 설문은 과학기술인(이하 과기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조사하고자 하며, 제도마련을 위한 노력에 연구자들의 의견이 묻어나길 바랍니다.

본 자료는 관련기관 게시판이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신 참여자에게 감사드립니다. ~With BRIC >

## 2. 설문환경

1-1. 실시기간 : 2004년 9월 20일 ~ 2004년 9월 30일 (11일간)

1-2. 참여자 : 총 151명

1-3. 실시방법 : BRIC 홈페이지(<http://bric.postech.ac.kr/>)의 BRIC Poll 메뉴 이용

1-4.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1-5. 통계프로그램 :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2)

1-6. 설문결과 URL: [http://gene.postech.ac.kr/poll/poll.php?bd\\_name=poll\\_20040921](http://gene.postech.ac.kr/poll/poll.php?bd_name=poll_20040921)

## 3. 결과요약

<설문참여자의 성향>

- 참여자는 총 151명으로 대학소속 참여자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이 주를 이루었음.

<설문결과>

- 국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와 “잘 모른다”는 응답자가 92.7%로 나타났음.
-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도 보상체계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

-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음.
- 보상기구 설립시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2명 (47.7%)으로 가장 많았고 국가기관/출연연 소속 응답자와 보상체계를 대충 알고 있다는 응답자들은 근소한 차이로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하였음.
-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공적기관 또는 공사형태로 국가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었음.

#### 4. 세부내용 분석

본 설문 결과는 1) 설문참여자의 성향, 2) 국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도, 3) 국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 4)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상제도들 중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5) 보상기구 설립의 운영형태 의 순으로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 1) 설문참여자의 성향

- 참여자의 소속 : 국가기관/출연연 23명 (14.2%), 대학 84명 (52.8%), 기업/바이오벤처 30명 (23.4%), 병원 4명 (6.0%), 기타 10명 (3.7%)으로 대학소속 참여자가 많았음.
-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는 115명 (76.2%), 수행한 적이 없는 참여자는 36명 (23.8%)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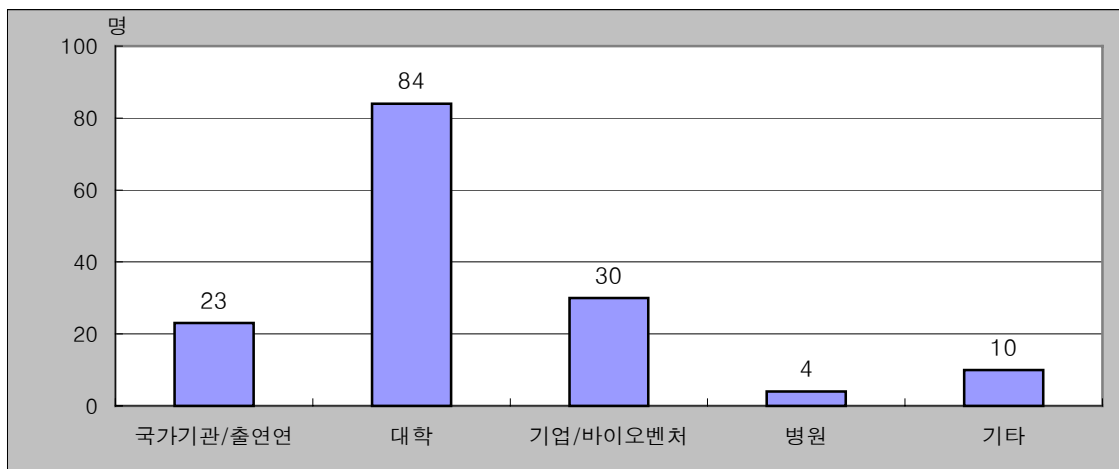


그림 1. 참여자의 소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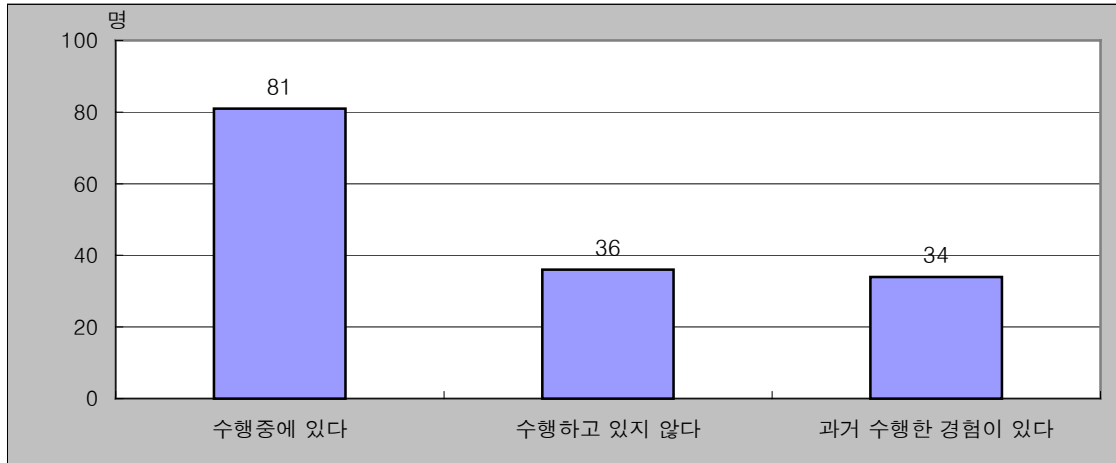


그림 2. 참여자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여부

## 2) 국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한 인지도

- 국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모른다” 는 응답자가 103명(68.2%)으로 나타났다.
- “잘 모른다” 와 “전혀 모른다” 는 응답을 합하면 전체 응답자중 92.7%에 달함.
- 국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도 수행과정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 국가적 보상체계의 인지도 결과

☞ 국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0명 (0%)
2) 대충 알고 있다	11명 (7%)
3) 잘 모른다	37명 (24%)
4) 전혀 모른다	103명 (68%)

표 2. 국가과제 수행여부에 따른 국가적 보상체계의 인지도




국가과제수행여부 보상체계 인지도	있다	없다	과거 수행한 경험이 있다
잘 알고 있다	-	-	-
대충 알고 있다	6 (7.4)	3 (8.3)	2 (5.9)
잘 모른다	22 (27.2)	9 (25.0)	6 (17.7)
전혀 모른다	53 (65.4)	24 (66.7)	26 (76.5)

단위 : 명 (%)

### 3) 국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

- 현재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한 적절성을 묻는 문항에서 대부분이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하였음.
- 국가적 보상체계를 “대충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참여자들 전원(11명)이 현재의 보상체계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다” 라고 응답하였음.
- 소속별 결과는 국가적 보상체계를 “대충 알고 있다” 고 응답한 참여자들의 빈도수가 낮아 결과의 유의성이 없으므로 나타내지 않았음.

표 3. 국가적 보상체계의 적절성

☞ 국가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1) 적절하다	34명  (22%)
2) 적절하지 않다	38명  (25%)
3) 잘 모르겠다	79명  (52%)

### 4)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상제도들 중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 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음.
- 그 다음으로 “과기인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이라고 응답.
- 이러한 결과는 모든 소속별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 국가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들도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 을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

표 4. 국가 연구개발 관련 희생자를 위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제도






☞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상제도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1)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	80명  (52%)
2) 대형과제 수행도중 불의의 사고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22명  (14%)
3) 별도의 국립과학기술현충원 건립	0 명  (0%)
4) 과기인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45명  (29%)
5) 기타	4 명  (2%)

표 5. 국가 연구개발 관련 희생자를 위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제도에 대한 소속별 결과

항 목 \ 소 속	국가기관/출연연	대학	기업/바이오 벤처	병원	기타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	12 (52.2)	43 (51.2)	17 (56.7)	3 (75.0)	5 (50.0)
대형과제 수행도중 불의의 사고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4 (17.5)	13 (15.5)	3 (10.0)	0 (-)	2 (20.0)
별도의 국립과학기술현충원 건립	-	-	-	-	-
과기인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5 (21.7)	27 (32.1)	10 (33.3)	1 (25.0)	2 (20.0)
기타	2 (8.7)	1 (1.2)	0 (-)	0 (-)	1 (10.0)

단위 : 명 (%)

표 6. 국가연구개발관련 희생자를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제도 (국가과제수행여부)

항 목	국가과제수행여부		
	있다	없다	과거 수행한 경험이 있다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	42 (51.9)	22 (61.1)	16 (47.1)
대형과제 수행도중 불의의 사고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10 (12.4)	7 (19.4)	5 (14.7)
별도의 국립과학기술현충원 건립	-	-	-
과기인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28 (34.6)	5 (13.9)	12 (35.3)
기타	1 (1.2)	2 (5.6)	1 (2.9)

단위 : 명 (%)

### 5) 보상기구 설립의 운영형태

-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2명(47.7%)으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 형태” 라고 51명(33.8%)이 응답.
- 소속별 결과 : 국가기관/출연연 소속 응답자들은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응답보다 조금 더 높았으나, 나머지 기관(대학, 기업/바이오벤처, 병원, 기타) 소속 응답자들은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율이 높았음.
- 현재 국가적 보상체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 전체 참여자의 80% 이상이 국가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7. 보상기구 설립시 바람직한 운영형태 결과






☞ 보상기구 설립을 한다면 어떠한 운영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72명  (47%)
2)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 형태	51명  (33%)
3) 과기인 자체의 자발적 조합기구 형태	15명  (9%)
4) 보상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없다	9명  (5%)
5) 기타	4명  (2%)



표 8. 보상기구 설립시 바람직한 운영형태에 대한 소속별 결과

소속 \ 운영형태	국가기관/출연연	대학	기업/바이오벤처	병원	기타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8 (34.8)	<b>45</b> (53.6)	<b>12</b> (40.0)	<b>2</b> (50.0)	<b>5</b> (50.0)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 형태	<b>9</b> (39.1)	31 (36.9)	8 (26.7)	1 (25.0)	2 (20.0)
과기인 자체의 자발적 조합기구 형태	3 (13.0)	6 (7.1)	4 (13.3)	1 (25.0)	1 (10.0)
보상기구의 설립 필요성 은 없다	2 (8.7)	1 (1.2)	6 (20.0)	-	-
기타	1 (4.4)	1 (1.2)	-	-	2 (20.0)

단위 : 명 (%)

표 9. 국가적 보상체계의 인지도에 따른 보상기구 설립시 바람직한 운영형태 결과

보상체계 인지도 \ 운영형태	잘 알고 있다	대충 알고 있다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	4 (36.4)	18 (48.7)	50 (48.5)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 사 형태	-	<b>6</b> (54.6)	17 (46.0)	28 (27.2)
과기인 자체의 자발적 조 합기구 형태	-	1 (9.1)	1 (2.7)	13 (12.6)
보상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없다	-	-	1 (2.7)	8 (7.8)
기타	-	-	-	4 (3.9)

단위 : 명 (%)

<< 설문 문항 >>

문항 1. 국책사업 연구개발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1. 잘 알고 있다
2. 대충 알고 있다
3. 잘 모른다
4. 전혀 모른다

문항 2. 국가 연구개발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가적 보상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1. 적절하다
2. 적절하지 않다
3. 잘 모름

문항 3. 국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상제도들 중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1. 국책과제 수행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험가입
2. 대형과제 수행도중 불의의 사고시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예우
3. 별도의 국립과학기술현충원 건립
4. 과기인 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제정
5. 기타

문항 4. 보상기구 설립을 한다면 어떠한 운영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1. 국가기관 산하 공적기관
2. 민간, 국가 공동형태의 공사형태
3. 과기인 자체의 자발적 조합기구 형태
4. 보상기구의 설립 필요성은 없다
5. 기타

문항 5. 귀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3. 과거 수행한 경험이 있다

문항 6. 귀하의 소속은?

1. 국가기관/출연연
2. 대학
3. 기업/바이오벤처
4. 병원
5. 기타

- 끝 -